

# CEO-Memo

CEM-2013-xx



## 한국경제의 엑소더스가 우려되는 7가지 징후

2013.6

## Contents

1. 역주행하는 증세 논의 .....	1
2. 과도한 기업규제 .....	2
3.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.....	3
4. 엔저현상 지속 .....	4
5. 높은 생산요소 비용 .....	5
6. 경직적 노사관계 .....	6
7. 반기업 정서 확산 .....	7

- 이 자료는 본회 산업정책팀 류성원 과장, 이재준 조사역, 정영모 연구원, 권병훈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.  
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TEL : 02-3771-0253      FAX : 02-6234-5375      E-mail : ljj0724@fki.or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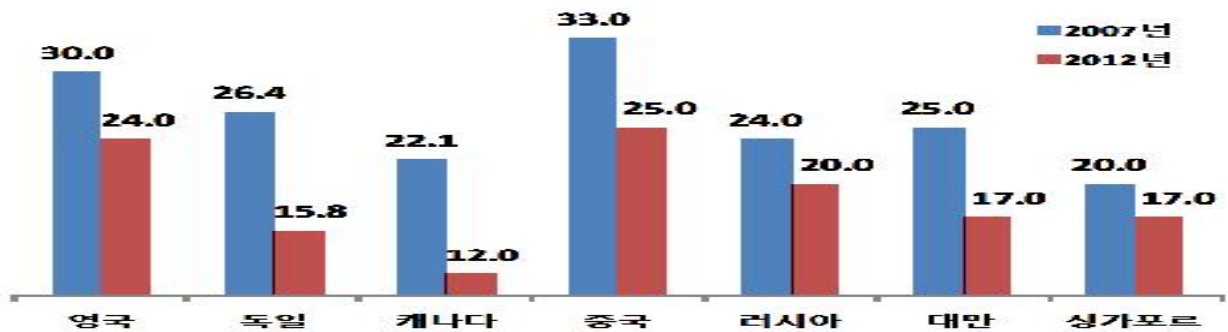
# 1

## 역주행하는 증세 논의

###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한국만 증세논의 !

- 최근 세계 주요국은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(Tax Competition)에 나서고 있는 상황
- 영국은 '07년 30%였던 법인세율을 '12년에 24%까지 인하했으며, 향후 2년간 1%p씩 단계적으로 인하해 '14년 22%까지 인하 예정
- 독일,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경쟁국들도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북유럽 국가들도 인하계획 발표
- \* OECD 평균 법인세율은 '90년부터 '12년까지 12.7%p 인하
- \* ① 스웨덴, 26.3%에서 올해부터 22%로 적용 ② 덴마크, 25%에서 22%로 인하 계획 발표(13.2월) ③ 핀란드, 24.5%에서 내년부터 20%로 인하 계획 발표(13.3월)

#### < 세계 주요국 법인세율 인하 동향 >



\* 주 : 영국, 독일, 캐나다는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 
 \* 자료 : OECD('12년), KPMG('12년)

-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추세와는 반대로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며, 법인세율까지 올리려는 움직임
-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모든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의 일몰도래時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('13.3월 기재부 조세지출 기본계획)
- \* '12년 기준 비과세·감면 대상은 174개 항목이며, 규모는 29.7조원
-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이미 법인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완료(現 기재위 조세소위 회부)
- \* 민주당案 3%포인트 인상(22%→25%), 진보당案 8%포인트 인상(22%→30%)

## 2

# 과도한 기업규제

### 규제 부담으로 한 번 떠난 기업은 돌아오지 않는다 !

- 정부규제 부담, 법체계 효율성, 기업관련 법규 등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적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수준
- WEF가 조사한 '12년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부담 및 법체계 효율성 (규제개선 측면)은 평가대상 총 142개국 중 114위, 96위에 불과
- IMD가 발표한 '13년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법규분야 경쟁력은 비교 대상 총 60개국가들 중 하위권인 39위 수준

#### <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관련 세계경쟁력 평가 순위 >

기관	평가지표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
WEF (142개국 대상)	정부규제 부담	98위	108위	117위	114위	-
	법체계 효율성 (규제개선 측면)	69위	87위	97위	96위	-
IMD (60개국 대상)	기업관련 법규	48위	44위	44위	42위	39위

\* 자료 : WEF('12.9월), IMD('13.5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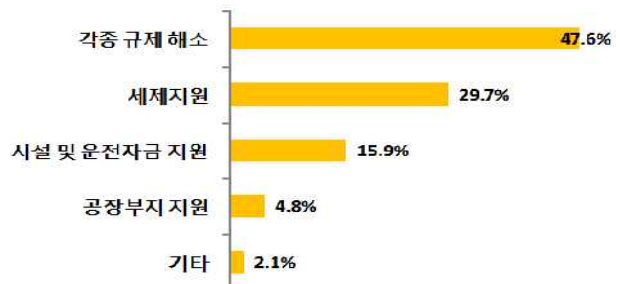
- 해외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 대부분은 국내 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, 그 이유로 '각종 규제 부담'을 우선적으로 지적
- 본회가 매출액 상위 1,000대 기업을 설문한 결과('12.7월), 응답기업 164개사중 국내U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1개사(0.7%)에 불과
- 과반수에 육박하는 기업들(47.6%)은 국내 U턴 촉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'각종 규제 해소'를 우선적으로 지적

#### < 국내U턴 의사 유무 >



\* 자료 : 전국경제인연합회 ('12.7월)

#### < 국내U턴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>



\* 자료 : 전국경제인연합회 ('12.7월)

### 단가인하 금지로 해외로의 거래선 변경 유인 증가 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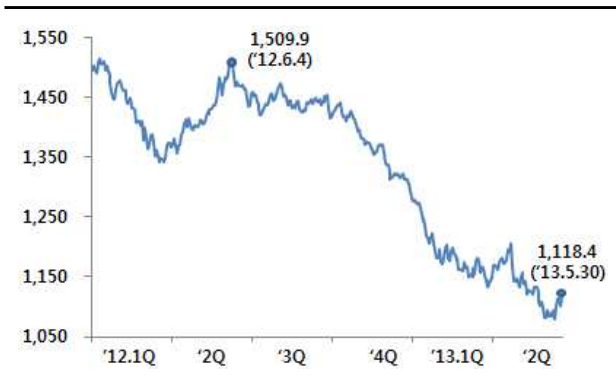
- 하도급법 개정(4.30일)으로 부당 단가인하時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,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납품단가 조정이 사실상 금지
- 부당한 단가인하 유형에 판매價 인하, 경영적자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경우를 포함, 경영상 불가피한 단가조정까지 징벌 대상에 포함
  - \* 경영상 불가피한 단가조정 사례
    - ①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총계약금액 변동을 합리적 근거로 인하하는 경우
    - ② 글로벌 가격경쟁으로 단가인하 없이 수출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
    - ③ 제품 사이클에 따라 구제품의 급격한 시장가격 인하로 단가인하가 불가피한 경우
- 거래관계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단순 경과실에 의한 납품단가 인하도 징벌배상에 적용되고, 입증책임도 원사업자가 부담
- 단가인하 조정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,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부품공급선을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실정
- 해외시장에서 제품 시장가격 등락이 급격히 이뤄질 경우, 수출기업들은 납품단가를 적시에 조정하지 못한다면 생존 불가능
  - \* 해외시장에서의 제품가격 급락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예시  
미국내 32인치 LCD TV 가격은 1,566달러('05년)에서 319달러('11년)로 79.6% 하락 → TV 부품원가 역시 동일 비율로 저렴하게 생산해야 미국시장 생존 可
- 최근 급격한 엔低로, 수출경합도가 높은 일본 제품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해외로의 부품공급선 이전 불가피
  - \* 원/엔 평균 환율은 '12년 1,413원에서 '13.5월 1,100원으로 22.2% 하락,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은 지난해 100원이라면 올해 현재 122원으로 상승했음을 의미
- 해외 업체 활용이 어려운 일부 업종(건설 등)은 협력사 교체가 쉽지 않겠지만, 상당수 제조업은 중국 등 해외로의 변경 가능성 충분
- 중국, 베트남 등 주요 개도국은 저임금 등 가격경쟁력은 물론 최근 기술경쟁력까지 확보, 부품 생산 경쟁력이 크게 신장된 상태

## 4 엔저현상 지속

### 급격한 엔저로 해외생산 기지 확대 우려 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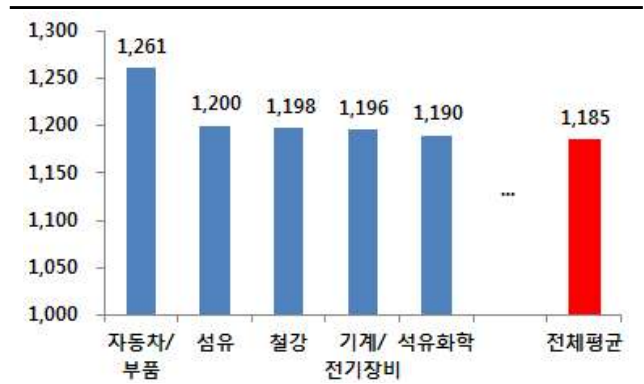
- 국내기업들은 엔저에 따른 채산성 압박에 봉착, 가격 경쟁력 확보 (현지 생산을 통한 관세 회피 등)를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능성 증가
- '13.5월 평균 원/엔(100¥) 환율은 1,100원으로, '12년 평균 환율 1,413원 대비 약 22.2%나 급락한 상황
- 주요 제조업종의 원/엔 손익분기점은 현재보다 무려 100원 가까이 높은 1,185원으로 국내 산업은 이미 적자구조에 직면(본회, '13.4월)

〈 원-엔 환율 추이 (원/100¥) 〉



\* 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〈 업종별 손익분기점 (원/100¥) 〉



\* 자료 : 전국경제인연합회 ('13.4월)

- 과거 엔화가치 상승으로 기업들의 급격한 해외이전을 경험한 일본 처럼, 우리나라도 엔저 지속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우려
- '07년 이후 엔/달러 환율이 급락하자, 일본 제조업의 국내 대비 해외 설비투자비중은 '10년 55.0%, '11년 74.2%로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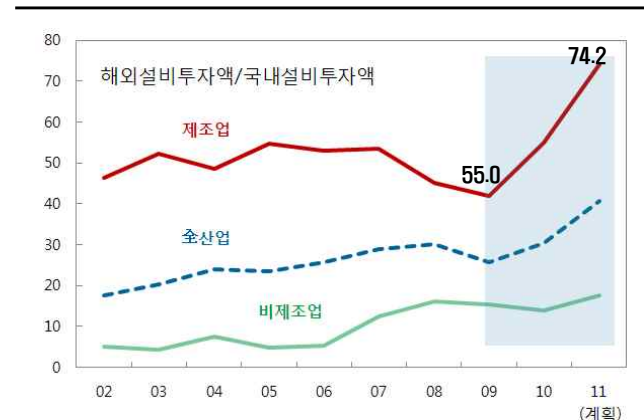
\* 엔고 始點과 해외설비투자 급증 始點간 2~3년간의 시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외 공장이전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'08~'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것

〈 엔-달러 환율 추이 〉



\* 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〈 일본의 해외설비투자비중(%) 추이 〉



\* 자료 : 일본정책투자은행, 설비투자계획조사('11.8월)

##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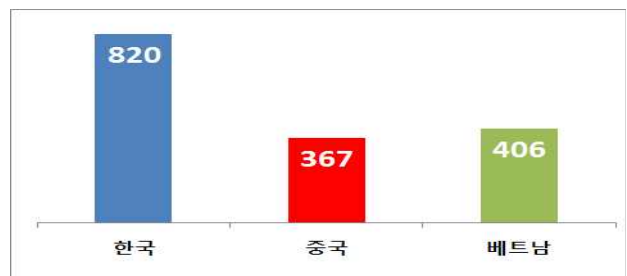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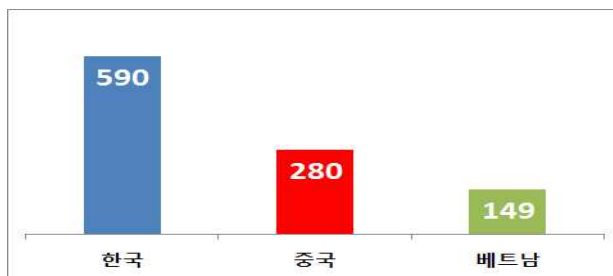
## 높은 생산요소 비용

### 땅값, 물값, 인건비 모두 비싸다 !

- 국내 산업용지 및 공업용수 가격은 중국, 베트남 등 주요 개발도상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해외로의 기업이전 요인으로 작용
- 산업용지 가격은 m<sup>2</sup>당 59만원으로 중국의 2.1배, 베트남의 4.0배 수준이며, 공업용수 가격은 톤당 820원으로 각각 2.2배, 2.0배 수준

< 산업용지 가격 (천원/m<sup>2</sup>, '12년 기준) >

< 공업용수 가격 (원/톤 '12년 기준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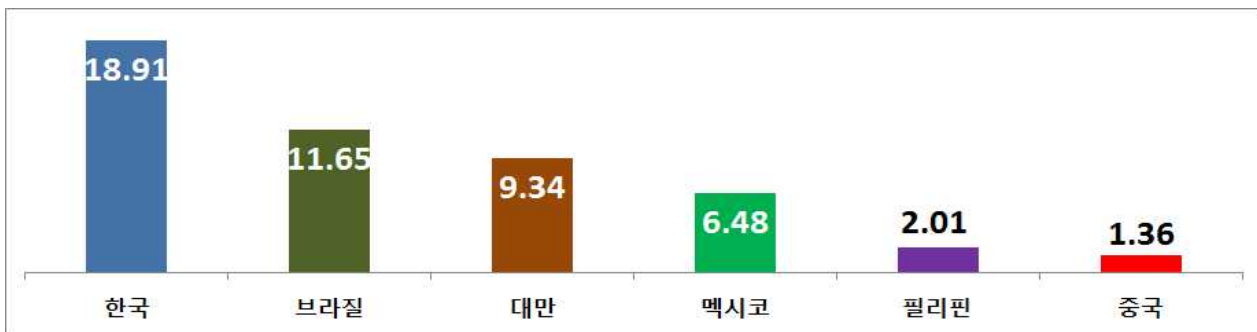


\* 자료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'12년)

-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근로자 보수도 브라질, 멕시코, 필리핀 등 주요 개발도상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
- 한국은 18.9\$('11년, 보상비용 기준)로, 브라질의 1.6배, 대만의 2.0배, 멕시코의 2.9배, 필리핀의 9.4배, 중국의 13.9배 수준

\* 보상비용(Compensation Costs) :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으로, 기본급, 상여 및 4대 보험성격의 지출까지 모두 포함한 근로자 보수

< 제조업 시간당 근로자 보수 (U.S. dollar, '11년 기준) >



\* 주 : 중국은 '08년 기준

\* 자료: BLS,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in Manufacturing('12년)

## 6 경직적 노사관계

### 노사간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!

-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비교대상 144개국중 73위에 불과(‘12년 기준)
- 특히 노사간 협력 순위는 129위로 최하위권에 속해, 우리나라의 노사간 반목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

#### <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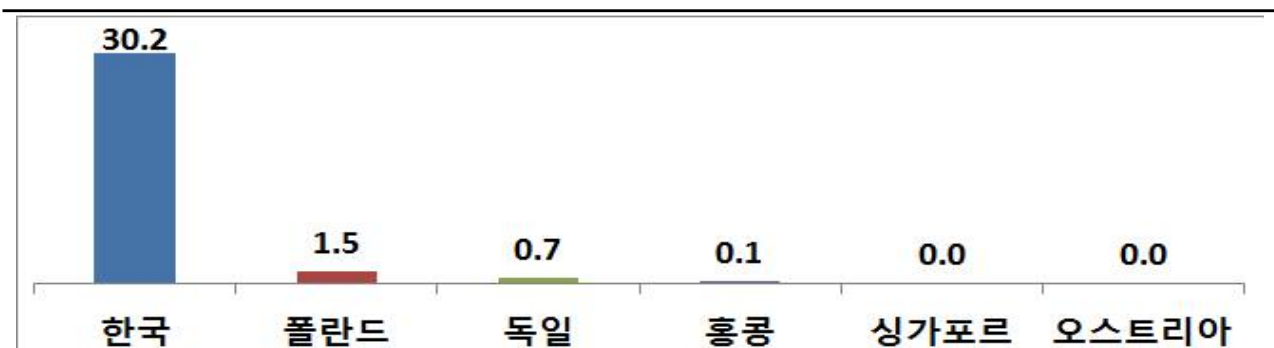
구분	2010년	2011년	2012년
노동시장 효율성 종합 순위	78위	76위	73위
· 노사간 협력	138위	140위	129위
· 정리해고 비용	114위	118위	117위
· 고용 및 해고 관행	115위	115위	109위
· 임금결정의 유연성	38위	50위	63위
조사대상 국가 수	139개국	142개국	144개국

- \* 주 :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 순위는 노사간 협력, 정리해고 비용 등 8개 항목의 종합 순위
- \* 자료 : WEF, *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*, 각 연도

- 경직적 노사관계로 우리나라 1,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‘10년 현재 30.2일로, 독일 0.7일, 홍콩 0.1일 등 주요국 대비 월등히 많은 수준
- \* 국가별로 노동쟁의 산정기준이나 경제규모 등이 달라 국가간 노동쟁의 건수나 근로손실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ILO는 1,000인당 근로손실일수를 노동쟁의 수준의 국제비교 지표로 활용

\* 1,000인당 근로손실일수 = 근로손실일수 ÷ 임금근로자수 × 1,000인

#### < 주요국가 노동손실일수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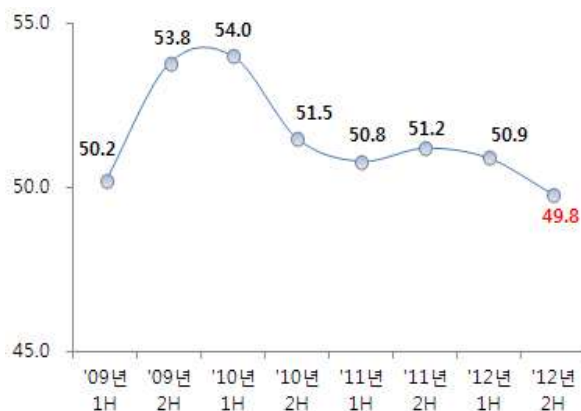
\* 자료 : ILO, 노동통계DB(‘10년)



## 반기업 정서 확산으로 기업인들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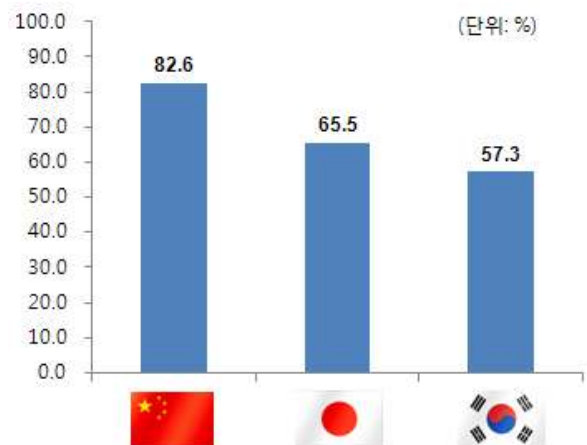
- 최근 우리사회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, 기업인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
- 국민들의 기업호감도 지수는 '10년 상반기 54.0을 고점으로 지속 하락, '12년 하반기 49.8로 4년來 최저 수준
- 韓·中·日 동북아 3국간 기업호감도 수준 비교時, 대기업에 호감을 가지는 韓국민 비율은 57.3%로, 中(82.6%)·日(65.5%) 보다도 낮음

〈 기업 호감도 지수 〉



\* 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대한상의 ('13.1월)

〈 한중일 3국 기업호감도 비교 〉



\* 자료 : 중앙일보 ('06.8월)

- 작년 총선 전후 불거진 경제민주화 논의가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어, 반기업정서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
- 양극화, 甲의 횡포 등 모든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기업책임론이 대두되고, 이에 대한 징벌적 대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짐
- 국민들은 기업들을 점차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악을 유발하는 주체로서 인식할 우려